

<서 평>

## 디아스포라 코리안의 국경을 넘는 멤버십과 그 정치, 그리고 영어

— Jaeun Kim, 2016 *Contested Embrace*, Stanford University Press —

서 호 철\*

1. 들어가며
2. 책의 열개와 내용
3. “*Contested Embrace*”란?
4. ‘민족’과 ‘nation’의 차이
5. 주민등록 · 신분확인제도의 보편성
6. 맺으며

### 1. 들어가며

김재은(Jaeun Kim)은 한국 출신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곳 대학에 취직해 있는 젊은 연구자다. 2016년 10월 25일 나는 10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났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마련한 ‘해외한국학 저자 특강’ 자리였고, 나는 동문수학이라는 빌미가 잡혀 ‘지정토론자’로 지목되어 있었다. 김재은이 책을 냈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받아들기는 했는데, 사실 책은 술술 읽히지 않았다. 영어 책이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내용은 아주 재미있었지만, 다음에 말할 여러 가지가 읽는 내내 발목을 잡았다. 꽤 여러 날 끄꿨던 끝에 간신히 체면치레 수

\*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학전공 부교수.

준의, 진술적(constative)이기보다는 수행적(performative)인, 요컨대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책 재미있게 읽었어. 대단해!” 하는 정도 내용의 글 서너 쪽을 토론문이랍시고 만들었다. 그런데 세상에나! 또 다른 토론자인 이철우 선생께서 거의 연구논문에 필적하는, 각주가 50개나 달린 토론문을 준비해 오신 거였다. 그날의 토론은… 상상에 맡긴다. 뒷풀이가 끝나고 헤어지는 길에 토론문 둘 다를 『한국문화』에 함께 서평으로 신자는 말이 나왔지만, 당연히 나는 애매하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가 지난 호 『한국문화』에 이철우 선생의 서평 「국경을 넘는 네이션의 형성과 재생산」이 실리게 된 경위다.

김재은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나는 그의 책을 책장 한 구석에 꽂았다. 언젠가 번역본이 나오면 다시 읽어보아야지. 그런데 해가 바뀌고 한참 있다가 또 한 번 『한국문화』에서, 내 글도 마저 실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하고 물어왔다. 같은 책을 읽고서 이렇게 운니(雲泥)처럼 다른 두 개의 서평이라면, 보는 사람이야 재미있겠지! 거절하고 싶었지만 구차한 속사정을 실토할 수도 없고, 핑계가 마땅찮았다. 며칠 발뺌을 하면서 이철우 선생의 서평을 다시 읽었다. 김재은 책의 연구사적 위치와 성취, 남은 과제까지를 적확히 짚은 이런 글이 이미 있는데 독후감 숙제 같은 내 글은 실어 무엇하랴 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철우 선생의 글은 조금 불친절하고 어렵다 싶기도 했다. 영어로 씌어져 어차피 당분간은 국내 독자들에게 널리 읽히기 힘든 책이라면, 전문가들끼리만 알아들을 본격적 분석과 비판에 앞서 목차와 개요 정도는 간단하게 소개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것이 내가 서평이랍시고, 던져두었던 미불족도(微不足道)의 글을 다시 꺼내 다듬는 한심한 짓을 하게 된 전말이다.

## 2. 책의 열개와 내용

모국어로 씌어진 글은 면으로 읽히지만 외국어는 선으로 읽힌다. 생각은 읽는 속도보다 더 늦게 그 선을 따라가고, 그마저도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나올 때마다 뚝뚝 끊긴다. 책을 처음 펼칠 때는 김재은이 쓴 책이라는데, 하는 반가움과

기대가 앞섰지만, 몇 페이지 넘기지 않아 아 이게 미국에서 나온 책이지, 하는 느낌이 더 강해졌다. 『성문종합영어』 수준도 밀도는 내 독해력으로는 이 책의 트랜디한 문장을 따라가기도, 머릿속에서 그것을 한국어로 옮겨보기도 쉽지 않았다. *Contested Embrace: Transborder Membership Politics in Twentieth-Century Korea* 라는 책 제목부터가 그렇다. 부제는 옮기자면 “20세기 한국에서 월경(越境: 국경을 넘는) 멤버십 정치”쯤 될까?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membership’이란 ‘citizenship’보다 좀 더 넓고 다양한 뜻이라고 골라 쓴 말이고, 국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같은 민족에<sup>1)</sup> 속해 있거나 그런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태가 기존의 민족주의나 국민국가체제와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transnational’이 아닌 ‘transborder’란 말을 썼다고 한다(책 8면). 그러나 그런 설명 앞에서는 아, 하면서도, 막상 ‘membership’이나 ‘transborder’, 심지어는 ‘transnational’도 한국어로 옮기거나 생각하기는 수월하지 않다. 꼭 내 영어실력만의 문제는 아닌 듯싶은 것이, 특강 자리에서 저자도 한국어와 영어를 뒤섞어가면서, 중요한 개념어들은 영어로 발표를 했던 것이다.

부제에서 짐작되듯이 책의 내용은, 20세기 전반 이래 한반도 바깥에 이주해 살아온 코리안,<sup>2)</sup> 그중에서도 특히 ‘자이니치(在日)’와 중국 ‘조선족’이라고 불리

1) ‘nation’에 해당하는 번역어는 ‘국민’이나 ‘민족’이겠지만, 한국어의 ‘국민’은 이미 국가에 의해 틀지어진 인민(Staatsvolk)이라는 느낌이 강할 뿐 아니라 집합명사가 아닌 구상명사로 시민(citizen), 국적자(national)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반면 한국에서 ‘민족’은 보통 정치적 공동체보다는 혈통적·문화적 공동체로 이해되며, 식민지기에는 국민의 결여태로, 해방 이후 분단체제에서는 현실의 두 국민 너머에 있는 역사적 실체라고 상상되고 있다. 아마 그런 이유에서 이철우는 ‘네이션’이라는 외래어를 그대로 쓰는 쪽을 택했겠지만(이철우, 2016 『(서평) 국경을 넘는 네이션의 형성과 재생산』 『한국문화』 76, 3면의 주1), 나는 김재은이 사용한 영어 ‘nation’은 오히려 한국어의 ‘민족’에 정확하게 대응된다고 생각한다.

2) 이들 디아스포라 코리안을 한국에서는 보통 ‘동포(同胞)’나 ‘교포(僑胞)’라고 불려왔지만, 자국 중심의 입장에서 벗어나 이들을 객관적으로 호명하자면 어떻게든 국가나 민족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그렇다면 ‘대한/한국’인가 ‘조선’인가 하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일본에서 대한민국 국적, 북조선 국적, 무국적(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래 남도 북도 선택하지 않아서 식민지 조선 또는 해방직후 남·북의 통칭이었던 조선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조선적(朝鮮籍) 등이 혼재하는 자이니치 전체를 ‘자이니치 코리안’이라고 부르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에서는 ‘코리안’이라는 명칭을 쓰기로 한다.

는 사람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모국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를 다룬다. 법적으로는 모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도 않고 모국에 대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므로, 민족에 대한 그들의 소속/자격은 ‘citizenship’이 아니라 ‘membership’이라는 좀 더 포괄적이고 애매한 말로 포착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재외동포비자나 재외국민 투표권 같이 현재 한반도 남·북의 정부나 시민사회가 그들에 대해 어떤 정책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역의 디아스포라 코리안 공동체의 형성에서부터 지금에 이르는 1백 년 이상의 역사다.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론: 국경 너머의 유대를 만들고, 해체하고, 다시 만들기

(Making, Unmaking, and Remaking Transborder Ties)

1. 이주하게 된 식민지민: 식민국가, 이주, 그리고 디아스포라 상황의 민족  
(Engaging Colonial Subjects on the Move: Colonial State, Migration, and Diasporic Nationhood)
2. “누구의 민족인가?": 냉전기 일본에서 재일코리안을 둘러싼 경쟁  
(“Who Owns the Nation?": Cold War Competition over Zainichi Koreans in Japan)
3. “죽(竹)의 장막”과 “은자의 왕국”을 넘어서: 두 개의 사회주의 조국 사이의 조선족  
(Beyon “Bamboo Curtain” and “Hermit Kingdom”: Korean Chinese between Two Socialist Fatherlands)
4. 마지못한 포용과 소속 투쟁: 탈냉전시대 조선족의 남한 “귀환” 이주  
(Reluctant Embrace and Struggles for Inclusion: Korean Chinese “Return” Migration to Post-Cold War South Korea)

결론: 에스닉 민족주의, 세계화, 그리고 월경 멤버십 정치의 미래

(Ethnic Nationalism, Globalization, and the Future of Transborder Membership Politics)

서론과 결론은 한국보다는 미국 사회과학계의 관심과 쟁점에 이어져 있는 이론적인 논의다. 저자가 여러 중요한 이론가의 개념과 문제의식을 아주 간결하고 세련되게 엮어서 자기 연구의 이론적 틀을 짜는 모습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여기 대해서는 이철우 서평에서 상세하게 논하고 있으므로 더 보탬 말은 없다. 1장은 이 모든 드라마가 시작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다. 막 근대 국민국가로 전환하려는 시점에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코리안 민족은 일본 제국의 지배와 통치성, 거기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에 의해 형성되었다. 저자는 이

장에서 식민지기 ‘조선인’이라는 범주와 개인의 신분확인의 최종적 근거였던 호적제도와, 일본제국 안팎의 경계(境界)와 이동 통제를 위한 장치라는 국가적 하부구조에 특히 주목하면서, 이 시기 조선인의 일본, 만주 이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본다.

2장은 해방 이후 냉전기 일본의 자이니치 코리언을 둘러싸고, 남한과 북조선 두 개의 조국이 벌인 경쟁 이야기다. 해방 곧 일본의 패전과 함께 일본 내의 조선인 즉 “『조선호적령』의 적용을 받는 자”는 더 이상 제국의 신민이 아닌 ‘외국인’으로 규정되었다. 미국 영향 하의 UN은 1948년 말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지만, 남·북 모두 일본과의 수교에는 나서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1950년대 자이니치 사회의 주도권을 잡은 것은 친북·공산주의 성향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였고, 여기 대해 우익세력은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민단)을 중심으로 결집했다. 1950년대 말부터 북조선은 일본 정부의 양해 속에, 남한에서는 ‘북송(北送)’이라고 부르는 자이니치의 귀환사업을 시작했고, 남한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때 일본과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을 맺음으로써 이후 대한민국 국적 자이니치에게 (협정)영주권을 보장해주게 되었다. 즉 북조선과 총련이 자이니치에게 “천국 같은” 사회주의 조국으로의 귀환(북송)이라는 카드를 제시했다면, 남한과 민단은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통한 일본 영주권 획득의 기회를 준 셈이다. 이 두 카드 중 어느 쪽을 택했는지가 이후 많은 자이니치의 운명을 크게 갈라놓게 되는데, 제주도 출신이지만 총련에 가입해서 북조선 국적을 가졌다가, 한참 세월이 지나서야 여러 가지 불리한 점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으로 갈아타게 되었다는 등의 복잡한 사연들도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다.<sup>3)</sup>

나를 포함해서 많은 독자들에게 가장 신선하게 읽힐 3장은 해방 이후 1970년대에 이르는 시기 중국과 북조선 사이에서 조선족이 어떻게 위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패전 이후 본토에 잔류한 조선인을 외국인으로 규정한 일본과 달리,

3) 소설로는 가네시로 가즈키(金城一紀)(김난주 옮김), 2006 『GO』, 북폴리오; 원수일(元秀一)(김정혜·박정이 옮김), 2006 『이카이노 이야기(猪飼野物語: 濟州島からきた女たち)』, 새미 등이 있다.

중국 공산당(중화인민공화국)은 역내의 조선인을 ‘국민’으로 수용했다. 중국과 북조선의 국경 넘나들기는 자유로웠으므로, 중국 국적의 ‘차오셴주(朝鮮族)’와 중국에 체재하는 북조선 국적의 ‘차오셴런민(朝鮮人民)’이 구별되어야 하는 정도만이 문제가 되었다. 차오셴주는 중국민족인 ‘한주(漢族)’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새로운 지역별·가구별 등록장치인 후커우(戶口)제도에 편입되었다. 이런 조치에는 중국 공산당의 소수민족 정책뿐 아니라 중국과 북조선, 조선족의 공통된 역사적 경험도 크게 작용했다. 만주의 조선족 상당수가 팔로군으로 국공내전에 참여해서 공산당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고, 한국전쟁 때는 중국이 북조선을 도와 그들 조선족 팔로군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던 것이다(抗美援朝). 이후 중국과 북조선은 지금껏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1950년대 이래 엔벤(延邊)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은 조선어와 조선문화를 지키며 살게 되었다. 반면 중국과 남한 사이에는 1980년대 말까지 전혀 교류가 없었으므로 국적을 비롯한 조선족의 소속/자격이나 이동을 둘러싼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1950년대 중국 농촌의 사회주의 경제는 곤핍했고 한편으로 북조선은 전후 재건을 위한 인력을 절실히 필요로 했으므로, 상당수 조선족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중국 정부의 묵인 하에 북조선으로 ‘귀환’했다. 심지어 자이니치의 북조선 귀환사업이 본격화되는 1960년경에는 엔벤에도 ‘조선바람’이 불었다. 북조선으로 귀환했던 조선족 중 일부는 그대로 북조선에 눌러앉고 일부는 중국으로 재차 ‘귀환’해서 이들의 국적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은 1970년대 중엽에 와서의 일이다.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1990년대 초 한중수교 이래 남한으로 이주한 조선족들에 대한 것이다. 이산가족 찾기와 한약 보따리상에서 시작된 조선족의 남한 방문이 이주노동과 국제결혼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조선족에 대해 방문취업비자(H-2, 2007년), 재외동포비자(F-4, 2008년)가 발급·확대되고 영주권 취득이 더 쉬워졌다는 사실이 앞부분에서는 잘 설명되어 있지만,<sup>4)</sup> 막상 4장의 대부분은 이주를 위한 주요한 편법으로서의 위장결혼 문제, 남

4)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를 ①재외국민과 ②“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외국국적동포’로 정의하면서, 그렇다면 최초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이며 그 국적은 무엇으로 입증되는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일

한에서의 차별 대우, 족보 뒤지거나 DNA 검사를 통한 남한 내 친족 찾기 등 그런 변화 이전의 사례들을 길게 다루고 있다. 저자의 면접과 연구가 H-2, F-4 비자가 막 도입되던 시기쯤에 이루어진 데다, 저자가 만난 조선족들의 체험과 기억 역시 그 이전의 힘든 시절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3. “Contested Embrace”란?

대략이나마(그것도 내 몇대로의 방식으로) 책 전체의 열개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제목으로 돌아가보자. 4장 제목을 내가 읽은 대로, 한편으로는 조선족에 대한 남한 정부 또는 시민사회의 태도와 대응방식을,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족의 ‘민족’ 정치를 의미하는 “마지못한 포용과 소속 투쟁”이라고 옮겨보자. 1992년 한중수교 이래 많은 조선족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남한으로 건너왔고, 방문·체류의 조건이 무척 불리한 중에도 서울역 앞 지하도의 한약 행상부터 시작해서 식당 종업원, 파출부, 건설노동자 등으로 억척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남한사회 곳곳에 자리잡았다. 초기의 이산가족 찾기의 감격이 가신 이래 남한 측이 적극적으로 조선족 유치에 나선 적은 없었던 반면, 『재외동포법』을 둘러싼 투쟁에서 보듯이 남한으로 이주한 조선족은 적극적으로 ‘민족’의 정체성 정치를 통해(책 186-192면) 남한사회에 정착하고 소속되고자 했다. 이럴 때 ‘embrace’는 남한 국

---

본제국의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채 해외로 이주한 사람(독립운동가를 포함해서)의 후손은 이 법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가 될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국내에 체류중이던 조선족 3명이 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정부 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2003년 말까지 개선입법을 요구하였다(정인섭 편, 2002 『재외동포법』, 사람생각, 22·145-146면). 이후 남한사회의 저임금 노동력 부족, 저출산·고령화 논의와 맞물리면서 조선족 등 재외동포에 대한 비자정책은 2007년 이후 대폭 완화된다. 여기 덧붙여, 김재은의 이 책과 이철우 서평은 1992년 수교 이래 남한정부가 조선족을 확정적으로 ‘외국인’으로 취급하게 된 것은 1997년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부터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책 181-182면; 이철우, 앞의 서평, 15-16면).

가와 사회가 조선족을 포함한 디아스포라 코리안을 따뜻하게(!) 열싸안고 맞아 들인다는 의미로, 4장의 소설 제목에 있는 어휘를 쓰자면 'exclusion'이 아닌 'inclusion'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거기서 유추해보면 '경쟁적 포옹(contested embrace)'이란, 남한과 북조선 두 개의 국가가, 또는 일본이나 중국까지가, 디아스포라 코리안을 서로 자국의 주권 범위 안으로 받아들이고 자국 또는 자기 민족의 멤버십을 부여하려는 태도를 가리킨다고 읽힌다.

그러나 이 책에서 'embrace'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앞서의 대략적인 소개에서는 빼 먹었지만 저자의 각별한 관심이자 이 책의 큰 특장(特長)은, 디아스포라 코리안의 월경 멤버십 문제를 단순히 주관적인 민족 정체성이나 민족주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호적이나 여권 같은 개개인의 신분확인하고 관련된 국가 관료제 행정의 등록문서와 관련시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럴 때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현실의 신분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일 텐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디아스포라 코리안의 상당수, 또는 대다수가 바로 그런 범주에 속한다. 식민지기 일본은 '조선인'을 '조선에 본적을 둔 자'로 정의했다. 제주도가 본적인 자가 돈을 벌러 일본에 건너가 있다가 해방을 맞았다. 처음에는 얼마쯤 돈을 모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영구적인 이주가 되었다. 친일파에 대한 대한민국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총련에 가입했고 이후 몇십 년을 일본에서 북조선 국적의 '외국인'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부모님 묘소라도 찾아보고 싶어 대한민국 국적으로 바꾸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국적은? 영주권은? '민족' 또는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은? 하는 식의 어려운 문제다.

'소수자'인 디아스포라 코리안에 한정할 때는 듣노라면 눈시울이 붉어지는 딱한 이야기 같지만, 남한(한국)에서 한국인으로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대다수라고 이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외연(外延)의 분명한 경계가 없이 두루뭉술하게 민족이나 네이션을, 한국사회를 상상한다는 것과, 실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서 그가 과연 그 민족, 그 사회에 속하는지를 묻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민족'의 정체성 정치는 축구 한일전의 뜨거운 응원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공항에서 외국인 입국창구의 길고 지루한 줄을 피해 내국인 전용



창구로 편하게 다니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때 내가 제시해야 할 것은 나의 정체성, 나의 애국심이 아니라, 규정대로 발급된 여권이며, 하다 못해 끊임없이 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주민등록증이다.<sup>5)</sup> 이 책의 주요 개념어의 하나인 ‘멤버십’ 역시 (민족)공동체의 안팎의 경계가, 그리고 거기 대한 개개인의 소속이 분명할 것을 전제로 한다. 멤버십이라는 것은 ‘시민권(citizenship)’이 아니라면 ‘거주자격(denizenship)’이든 ‘에스니즌십(ethnizenship)’이든 뭐라도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매겨진, 그리고 누가 그 정도로 그 공동체에 소속되는 해당자인지가 분명히 규정된 자격이다. 따라서 현실의 국민국가와 국가간체제에서는 정체성(identity)보다 신분확인(identification)이 앞서야 하며, 저자도 인용했듯이, “국민(national) 공동체라는 개념은 막연히 ‘상상’되기보다는 서류 위에 코드화되어야 한다.”<sup>6)</sup>

우리 대다수가 이 문제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이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보다 훨씬 쉽고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국민국가의 편법 때문인데,<sup>7)</sup> 바로 여기서 우리와 평생 무관할 것 같은 ‘생명정치’가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해온다. 저자는 4장에서 재외동포비자가 생기기 이전 조선족들이 남한행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위장결혼을 하거나, 족보나 제적부(除籍簿: 호주의 사망·승계로 폐기된 예전의 호적)를 뒤지고 DNA 검사를 해

5) 여기 대해서는 책 14-20면에서 소개한 여러 연구들, 특히 John Torpey, 2000 *The Invention of the Passpo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ne Caplan & John Torpey (eds.), 2001 *Documenting Individual Ident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Gérard Noiriel, 1996 *The French Melting Po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등을 참조. 그밖에 발렌틴 그뢰브너(김희상 옮김), 2005 『너는 누구냐?: 신분 증명의 역사』, 청년사; 서호철, 2008 『국민/민족 상상과 시민권의 차질, 차질로서의 자기정체성』 『한국문화』 41, 85-112면 등 참조.

6) 책 14면; Torpey, *ibid.*, p.6. 이 문제에 대해 베네딕트 앤더슨은 ‘열린 계열’과 ‘닫힌 계열’을 애써 구분하면서 두루뭉술한 민족의 상상을 옹호한 바 있다. Benedict Anderson, 1998 “Nationalism, Identity, and the Logic of Seriality” *The Spectre of Comparisons*, Verso, pp.29-45.

7) 조르조 아감벤(박진우 옮김), 2008 『호모 사케르』, 새물결, 247-253면. 아감벤은 이 점을 두고 “출생이 즉각 국민이 되며, 이 두 용어 사이에는 어떤 간격도 없다”고 썼다(253면, 강조는 아감벤). 이탈리아어로 ‘출생(nascita)’과 ‘국민(nazione)’은 모두 라틴어 ‘nascere(태어나다)’에서 파생된 말이다.

가면서까지 남한의 친족들과의 혈연관계를 증명하려고 노력했던 사례들을 들고 있다(192-204면).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국민인 자는 이런 수고를 요구받을 일은 없겠지만, 이것을 ‘단일민족’이자 ‘단군의 후손’이라는 우리의 혈통적·에스닉(ethnic) 민족주의에 적용해보면 과연 어떨까? 집안마다의 족보를 다 모아본다면 과연 혈통상으로 단군의 후손은 몇 명쯤이나 될까? 성씨가 중국에서 유래한다는 전인구의 1/3 가량은 ‘한족(漢族)’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일까? 과연 이 ‘단일민족’ 설은 DNA 검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

대답할 필요도 가치도 없는 물음은 그냥 놓아두고 ‘embrace’의 의미로 돌아가 보자. 내 짐작에, 민족 정체성과 국민국가의 통치성을 교차시키는 저자의 관심과 전략으로 봐서 이 ‘embrace’라는 말은 아마 존 토피가 사용한 비유에서 온 것이 아닌가 싶다. 토피는 마이클 만(Michael Mann)이나 스카치폴(Theoda Skocpol), 랜달 콜린스(Randall Collins) 등이 국민국가의 관료제 또는 통치성이 사회를 ‘파고든다/침투한다(penetrate)’는 비유를 쓴 데 대해, 주민등록과 여권 같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등록하는 국민국가의 기술은 ‘penetrate’라기보다는 차라리 ‘embrace’라고 해야 한다고 썼다.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가 쓴 어휘는 그 구성원들을 ‘에워싸고(surround)’, ‘포착한다(take hold of, lay hold of)’는 것인데, 자기가 쓴 ‘embrace’는 독일어 ‘erfassen’에서 온 것이라고 했으니까 ‘포옹’보다는 ‘포착’이 더 정확한 번역이겠다.<sup>8)</sup>

그런데 과연 저자가 책 제목은 물론 장·절 제목의 여러 곳에서 쓴 모든 ‘embrace’를 그렇게 ‘포옹’이 아닌 ‘포착’으로 읽어도 되는 것일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아니면 이것을 따뜻한 ‘포옹’과 싸늘한 ‘포착’의 중의(中意)로 읽어달라는 것이 저자의 의도였을까? 또 한 가지, ‘contested embrace’의 주체, 당사자는 누구일까? 2장에만 한정해서 본다면 자이니치 코리안을 두고 남한과 북조선, 민단과 총련, 여권 브로커와 북송 브로커가 경합을 벌인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3장이나 4장까지를 고려해 넣을 때 경합의 주체는 누구일까? 또, 남한이나 북조선의 입장에서 보자면 디아스포라 코리안은 코리안이라는 민족이지만,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자국의 국민

8) Torpey, *ibid.*, p.11.

(시민)이거나 영주권자, 체류자일 텐데, 가령 중국이나 일본은 ‘embrace’의 주체가 되어 그 ‘contest’에 참가할 수 없거나 참가하지 않는가? 저자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책의 초점이 국경을 넘는 코리안 민족의 멤버십이 되다 보니, 자이니치와 조선족에 대한 중국, 일본 정부의 입장이나 정책은 시대적 배경으로만 물러앉은 것처럼 보인다.

#### 4. ‘민족’과 ‘nation’의 차이

이제 영어 얘기를 조금 해보자. 앞서도 말했듯이 이 책의 트렌디한 영어는 나를 꽤나 괴롭혔다. 책을 읽으면서,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숙어도 ‘숙어(熟語)’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중학생 정도의 고민을 자주 했더랬다. 그런데도 어쨌든 내용은 수월하게 읽혔다. 내용이 내용인 만큼, 수월하게 읽히지 않았다면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는 하겠다. 그런데 거기서 반대로, 그렇다면 한국의 근현대사에 익숙지 않은(?) 영어권 독자들에게 이 책은 어떻게 읽힐까 하는 참 실없는 의문이 들었다.

예컨대 자이니치나 조선족을 ‘transborder nation’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재은과 내가 함께 들었던 1990년대의 ‘민족사회학’ 수업 수준으로 돌아가자면 한국의 ‘민족’과 ‘국민’이라는 말과 달리 유럽 언어의 ‘nation’은 대개 ‘state’와의 관련성 속에서 존재하고, 국민국가를 이루지 못한 소수민족은 ‘ethnic group’(그 수업에서 처음 배운 말이었다)이라고 부른다고 하지 않았던가? 저자도 책에서 “ethnic Koreans in Japan and China(9면)”이라는 말을 쓴다. 요컨대 일본에서 자이니치, 중국에서 조선족은 어디까지나 ‘ethnic group’인 것이다. ‘transborder’라는 한정어 아래 그들이 ‘민족’으로 상상되는 것은 한반도와, 한반도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다. 그런데 미국 학계에 대해서도 자이니치나 조선족을 ‘(transborder) nation’이라고 해도, 정말 괜찮은 것일까? 괜찮으니까 학위논문이 통과도 되고 이렇게 멋진 책으로도 나왔겠지만, 내게는 여전히 20년 전의 교과서적 지식 수준에서 ‘nation’은 한국어의 ‘민족’

보다는 좀 덜 혈통적·문화적이고 더 정치적인 어떤 것이 아닐까 하는 주저됨이 있다.

더 심하게 말하자면, 그래도 ‘nation’이란 한국어의 ‘민족’보다는 ‘국민’, “함께 공동의 삶을 계속하기를 명백하게 표명하는 욕구”이자 “매일의 인민투표”<sup>9)</sup> 쪽에 더 가까운 게, 가까워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있다. 물론 20세기 말 이래 세계화의 물결이 우리를 휩쓸고 있고 정보통신의 환경도 엄청나게 달라져서, 베네딕트 앤더슨조차도 못마땅한 투로나마 ‘장거리(long-distance) 민족주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기는 하다.<sup>10)</sup> 하지만 ‘nation’이라는 것은 단지 고향과 부모형제를 찾거나 돈을 벌러 고향에 돌아가거나 하는 것 외에, 조금 더 깊은 정치적 책임감과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또 디아스포라 코리안이 코리안 민족(nation)의 일원(member)이라는 것은, 그들이 각자 현재 살고 있는 국가의 국민(시민)이자 국적자라는 것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가령 조선족은 중국 국민의 일부이자 중국의 소수민족이면서 동시에 국경 너머에 있는 코리안 민족이다. ‘국민’도 ‘민족’도 영어로는 ‘nation’이라고 할 때 과연 이런 문장을 영어로 옮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한과 조선족의 국경 너머의 ‘민족’ 정치뿐 아니라 중국과 조선족 사이의 ‘민족’ 정치도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원근법을 가진 이 책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은 반쪽의 이야기가 아닐까?

9) 에르네스트 르낭(신행선 옮김), 2002 『민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81면. 그러니까 이 번역서 제목에서 ‘nation’을 ‘민족’으로 옮긴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10) 베네딕트 앤더슨(편집실 옮김), 2000 『원거리 내셔널리즘』 『민족연구』 4, 117-125면. “법률상으로는 현 거주지 국가에서 시민권을 얻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국민이나, 실제로는 주재하는 나라에는 거의 애착을 느끼지 못하고 (중략) 통신기술의 발달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게 된 그들의 상상의 고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일에 투표 이외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면서 참가하는 것으로 (중략) 이러한 시민권 없는 참가는 어쨌든 무책임한 것일 수밖에 없(125면)”다는 앤더슨의 설명에는 짜증이 묻어난다.

## 5. 주민등록 · 신분확인제도의 보편성

1장의 시대적 상황을 비롯해서 글 전체의 중요한 제도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은 식민지기 이래의 ‘호적’제도인데,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이니치의 국적 확인이나 조선족의 남한 이주 과정에서 식민지기의 호적부나 제적부가 어떻게든 활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몇 가지 다른 층위가 있을 것 같다. ① 모든 인민/인구의 출생 · 사망 · 혼인 등이 국가에 의해 등록되고, 궁극적으로 그 등록에 근거해서 거주등록, 이동의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든 근대국가의 문법이다. ② 그러나 그 기본적 등록이 하필이면 ‘호적’ 즉 호(戶)=이(家)≒가족의 등록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메이지기 일본의 특수성에 속한다. 그것은 분명 프랑스혁명으로 창출된 근대국가의 주민등록 · 신분확인제도가 동아시아의 가족주의 전통의 영향에 의해 변형된 것이지만, ③ 한 때 일본제국에 속했던 남한, 북조선, 타이완 등 각국이 1945년 이후 어떤 형태의 주민등록제도를 도입 · 유지하게 되는지는 또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남한이 1997년까지 식민지기 호적제도를 거의 그대로, 이후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변형된 형태로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가족주의 전통으로도, 식민지 유산이라는 말로도 온전히 설명될 수 없다. 중국이나 북조선에는 호적제도가 아닌 다른 형태의 등록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물론 각 제도가 서로 얼마나 다른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월경 멤버십’의 확인에 개인의 정체성이나 애착심보다 신분증명의 서류가 먼저 요구되었다는 것과, 그것이 하필 ‘호적’이었다는 점이 의식적으로 조금 더 분명하게 구분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sup>11)</sup>

11) 국가별로 주민등록 · 신분확인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국제결혼 등 국제사법(國際私法)의 현실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생겨난다. 출입국관리에 중사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익명의 저자가 쓴 한 책은, 그런 실태를 생생히 보여준다(편집부, 2010 『위험한 선택, 국제결혼』, 연인M&B). 다른 한편, 국가별 주민등록 · 신분확인제도의 차이는 식민지기 미주 한인 ‘사진신부(picture bride)’로부터 오늘날의 국제중매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틈새’를 만들기도 한다(서호철, 2011 『국제결혼 중개장치의 형성: 몇 가지 역사적 계기들』 『사회와역

같은 이야기지만, 가령 1990년대 조선족의 입국(제한)을 위해 식민지기 호적부 등을 통해, 앞서도 말했듯이 나중에는 DNA 검사까지 동원해서 그의 신분 또는 남한주민과의 친족관계를 증명하게 한 것은 일종의 블랙 코미디이겠지만, 그런 월경 이주자에 대해 어떤 종류의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모든 국민국가의 일반적 문법이다. 저자도 지적하듯이 근대국가의 멤버십이라는 것은 “an unmediated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individual(116면 등)”일 텐데, 그 관계를 분명하게 확립/확인할 수 없는 ‘월경 멤버십’에 대해서는 결국 애초 이주한 조상으로부터 거슬러가는 가족관계 등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 하필 한국에는 식민지기 이래의 호적이라는 편리한 장치가 있었을 뿐이다. 경우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미국 모르몬교도들의 ‘뿌리찾기’에는 조상들이 미국으로 이주할 때의 승선자명부라든지 당시의 신문기사, 심지어는 교도소 수감자 명단 등도 활용된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불가피하게 언급되어야 할 혼인·출생의 계보와 ‘호적’이라는 (유사)가족 단위의 등록제도, 그리고 동아시아의 가족주의 전통/심성(心性), ‘동포(同胞)’라는 가족 메타포는 각각 조금씩 다른 것이고, 호적이 신분증명의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많은 경우 역사적 우연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특히 뿌리뽑힌) 사람들이 때로 호적이나 족보 같은 장치에 대해 감정적 집착을 갖게 되는 것은(책 106-107면 등) 또 다른 문제다.

## 6. 맺으며

본 서평의 2장에서는 주로 거시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을, 그것도 대개 책 자체의 내용보다는 시대적 배경과 일의 경위 정도를 요약하는 데 그쳤지만, 실제 책의 내용은 훨씬 풍성하고 다층적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거의 소개하지 못했지만, 저자는 많은 자이니치와 조선족을 면접조사해서 역사의 큰 흐름과 제도의 틈나바퀴에 갇힌 사람들의 삶을 꼼꼼히 잡아내고 있다. 면접조사의 결과는 문헌자료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책의 3장 서술에서도 큰 몫을 차지한다. 이런 책의 내

사』 91, 99-131면).

용도 내용이지만, 특히 그것을 엮어낸 책의 체제는 무척 흥미롭고 매력적이다. 1990년대 이래 한국(남한)에서는 ‘다문화’ 담론과 실천이 붐을 이루고 있고, 자이니치, 조선족, 고려인 등 한참동안 잊혀졌던 디아스포라 코리안 범주들도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각각의 코리안 공동체의 이주·형성사로부터 현재 해당지역에서의 생활, 한국으로의 (귀환)이주와 한국에서의 생활 등에 대해 그동안 축적된 연구성과도 상당하다. 그러나 이 책처럼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큰 틀에서 자이니치와 조선족의 역사, 그들에 대한 남한과 북조선 국가와 사회의 태도와 전략, 그 뒤를 일관하고 있는 국민국가의 인구파악·등록과 이동 통제의 문서와 관료제 행정 등을 하나로 묶어낸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책이 영어본으로만 남지 말고 빨리 번역이 되어,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널리 읽히고 좋은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제어 : 민족, 멤버십, 정체성, 신분확인, 월경, 디아스포라, 코리안, 자이니치(在日), 조선족, 김재은